

“이젠 탈 수나 있으려나” 비휠체어 전용택시 폐지에 장애인근심

광주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 폐지 수순
 “휠체어 이용 안 해도 승·하차시 도움 필요해”
 영업용 택시는 승차 기피에 여러 불편 뒤따라

“휠체어 안 타도 도움 절실한데...이젠 택시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

광주에 사는 선천성 지체 장애인인 이형일(47)씨는 20일 광주시가 내년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휠체어를 타지는 않지만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매일 같이 비휠체어 전용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 계단 이용과 환승이 어려워 버스는 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씨는 전용택시에 대해 “마음 놓고 탈 수 있다”고 평했다. 기사가 승·하차할 때 부축하거나 안전띠 착용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기 때문이

다. 영업용 택시와 달리, 안정적인 탑승 자체가 허트러지 않도록 주행 속도를 낮추기도 한다.

이씨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가 사라지면 당장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차에서 내릴 때 비장애인 승객보다 몇 분이 더 걸린다. 일반 영업용 택시에서 내리는데 급히 출발해 하마터면 다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용택시 기사들은 장애인들이 겪는 고충을 알고 충분히 도와준다. 겨울철 빙판길·빗길 등 거동이 불편할 상황 같으면 하차 직후에도 먼저 나서 부축을 해주기도 한다. 승객으로 익숙한 장애인을 편견·거리낌 없이 대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용택시는 장애인 승객만 탑승할 수 있어 배차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승차 거부도 없다.

이씨는 “일반 영업용 택시는 수익을 내려면 부지런히 운행해야 한다. 승·하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애인 승객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 뒤 신발 신는 데 애를 먹어 5분 늦게 나갔더니 그새 택시가 근처 다른 승객을 태우고 가버린 경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호출 배차 시 일부 금전 지원만 받는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 승객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용 편의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그동안 전용택시를 이용한 주변 사람들 모두 걱정이 크다”고 걱정했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 중단하면서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일부를 빼면 실수오자인 우리는 전혀 몰랐다. 전용택시 기사들조차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빨리 추진해야 하느냐”며 “시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3~6개월 만이라도 제도 유예기간을 두고, 대안인 바우처 택시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택시. (사진=광주시 제공)

기사 인식 교육 강화 등 보완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현재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전용 승합차(116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전용 택시(임차 택시·89대), 바우처 택시(100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비휠체어 전용택시는 비장애인 승객은 태우지 않는다. 시는 개인 택시 기사와 1년 단위 임차계약을 체결, 월 280

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택시는 이용 요금도 따로 받는다.

그러나 전용택시 기사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퇴직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비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면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2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환기자

무등산 정상 내년 9월부터 상시개방

광주시·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군·국립공원공단과 내년 9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 강기정 시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무등산 정상이 내년 9월부터 상시개방된다.

광주시는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국립

공원공단과 함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강기정 시장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발표에 이어 내년 9월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세부절차 이행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1966년 공군 주둔으로 오르지 못했던 무등산 정상이 2023년 9월부터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다.

협약서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역할 분담 ▲세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상시개방 탐방로 설치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상호 협력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은 내년 2월 상시개방 탐방로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부대 철책 이설, 탐방로 설치 등을 마친다.

앞서 광주시는 군 당국과 협의, 2011년 무등산 정상을 처음으로 일시 개방했다.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5차례 정상을 일시 개방했다. 이 기간 무등산 정상을 찾은 등산객은 47만5000명이 넘는다.

강기정 시장은 “1966년 12월 20일 무등산 정상에서 군사임무를 개시한지 56년이 되는 오늘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협약을 맺게 돼 무척 뜻깊다”며 “기술과 안보 체계 등 시대적 상황이 변화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되면 온전히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산은 시민들에게 쉼의 공간이자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라며 “내년 9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각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광주고법, 미성년자 성착취범 엄중 처벌해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올바른 사법적 판단 촉구



지역 여성단체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에 대한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성착취범을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3년 지역 한 피해자를 성착취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는 2015년 1

심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항소했고, 2심 당시 광주고법은 ‘대법원의 유사 사례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5년이나 판결을 미룬 뒤 2021년에서야 가해자에게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지난 4월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며 “대법원은 2심 당시 무죄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이 정의와 형편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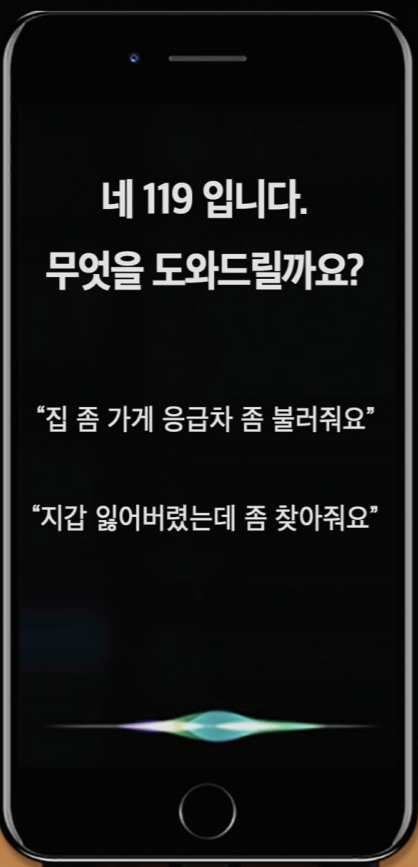
또 “피해자는 거듭되는 재판에서 수없이 요구되는 ‘피해자다움’과 피해 입증 책임으로 2차 피해에 놓이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7년 동안 피해자는 회복을커녕 무력함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뿐”이라며 “고법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성착취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호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